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44호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윤리센터, 비리와 부실운영 공약제보자 색출 멈춰야" 주장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구제 기관 맞는지 의문"

VS 센터 "체육계 비리 척결 노력 중 흠집내기 멈춰야"

임태경 일요주간기자

체육 선거철..이 회장 3연임 내부반대의견

[세종로의 아침] 대한체육회의 사명

홍지민 서울신문기자

김세훈의 스포츠N

이기흥 회장, 품위 있는 퇴장을 준비하라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의뢰

[단독] "이기흥, 11일 국회 출석 요구 받자 하루 전 사비로 스위스 출장"

김경필 조선일보기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가동해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키로

최저학력 미달한 학생 선수도 대회 참가 가능해진다

김수현 연합뉴스기자

'운동해도 일정 수준 교육 필요' 68.94%

국민 72.4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긍정적"

안정훈 뉴스토마토기자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

인권연구소 합동워크숍 개최

2024.11.09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합동워크숍 개최



지난 11월 9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최저학력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저학력제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민연대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미래 스포츠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나갑시다!

체육시민연대 드림

보도자료 	배 포	2024.11.06.(수)
	보도일시	2024.11.06.(수)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성 명 서]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멈추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는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색출을 즉각 멈추라.

체육시민연대는 다수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센터의 비리와 부실운영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지난 10월 7일부터 24일 사이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일부 의원실에 관련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관련 비위 사실이나 의혹은 신입이사장의 인사 검증 실패 및 자격 문제, 경찰 출신 전 이사장이 주도한 경찰 공제회 건물로의 청사 이전 문제, 문체부의 부당 간섭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문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징계 남발 문제, 직원 간 승진실적 담합 의혹 등 스포츠윤리센터가 도저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발한 내용이다.

특히 내부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각종 공보물 등에 나타나는 인권감수성 부족 문제는 센터가 과연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이 맞는 것인지 의심받기 충분하다. 체육시민연대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뤄지기를 원했던 사안의 경우도, 센터 관계자가 의원실에 가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하거나, 추정 인물을 제보자로 특정하여 마치 제보자가 색출된 것처럼 공유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간 집단 따돌림과 부당 징계로 센터를 떠난 직원이 다수라는 점에 미루어 센터의 이러한 행태는 고질병으로 보인다. 체육인들의 인권을 다루는 기관의 인권감수성이 이런 수준이라면 센터는 폐지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그간 스포츠에서의 인권침해 및 비리문제를 담당해 온 여러 기관을 모두 폐지하고, 통합한 체육계 유일의 인권구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징계 요청에 대한 미회신 문제로 신뢰성을 잃었고, 졸속 출범으로 인한 내부 조직 및 조사관 자질 미달로 그 전문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상급 기관인 문체부의 간섭과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 독립성마저 훼손되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로 전락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 인권침해 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촉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색출을 즉각 중단하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제보자 색출에 대해 이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제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체육시민연대는 이와 같은 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을 시, 더 많은 체육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 폐지를 촉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11월 06일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구제 기관 맞는지 의문" VS 센터 "체육계 비리 척결 노력 중 흠집내기 멈춰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색출을 즉각 멈춰라!”

지난 6일 체육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다수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의 비리와 부실운영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일부 의원실에 관련 사실을 알린 바 있다”고 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체육시민연대 성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 (설명) 사실상 없고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제보자 색출을 시도 추정 인물을 제보자로 특정해 마치 제보자가 색출된 것처럼 공유했다는 체육시민연대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가 의원실에 가서 제보자 색출 시도” VS 스포츠윤리센터 “국회를 상대로 이래라저래라 요구할 수도 없는 위치”

체육시민연대는 “관련 비위 사실이나 의혹은 신임이사장의 인사 검증 실패 및 자격 문제, 경찰 출신 전 이사장이 주도한 경찰 공제회 건물로의 청사 이전 문제, 문체부의 부당 간섭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문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징계 남발 문제, 직원 간 승진실적 담합 의혹 등 스포츠윤리센터가 도저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성명서를 통해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부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각종 공보물 등에 나타나는 인권감수성 부족 문제는 센터가 과연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이 맞는 것인지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체육시민연대가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뤄지기를 원했던 사안의 경우도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가 의원실에 가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하거나 추정 인물을 제보자로 특정해 마치 제보자가 색출된 것처럼 공유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간 집단 따돌림과 부당 징계로 센터를 떠난 직원이 다수라는 점에 미루어 센터의 이러한 행태는 고질병으로 보인다”며 “체육인들의 인권을 다루는 기관의 인권감수성이 이런 수준이라면 센터는 폐지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그간 스포츠에서의 인권침해 및 비리문제를 담당해 온 여러 기관을 모두 폐지하고 통합한 체육계 유일의 인권구제 기관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징계 요청에 대한 미회신 문제로 신뢰성을 잃었고 졸속 출범으로 인한 내부 조직 및 조사관 자질 미달로 그 전문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섭과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 독립성마저 훼손돼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를 향해 “체육인 인권침해 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색출을 즉각 중단 및 제보자 보호 대책 수립·시행하고 제보자 색출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이사장이 직접 사과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이 같은 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을 시 더 많은 체육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스포츠윤리센터 폐지를 촉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가 의원실에 가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다는 체육시민연대 측 주장에 대해 “국회라는 곳이 보좌진들이 요구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요구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실에서 요구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가서 이와 관련된 것을 보좌진들에게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시민연대에서 거시적으로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설립 초기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시민연대 등 타 기관 단체들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서 이 부분이 예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개선되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육계의 비리 등이 심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큰데 (스포츠윤리센터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의아하다”며 “이사장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검증이 구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사장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부임을 했고 경찰 출신이랑 이전 청사 문제들은 다 요구 자료로 왔던 것들이다”며 “어떤 검증이 실패한 건지, 실패했으면 왜 실패한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이 표면적으로 강조만 하는 것 같다”고 체육시민연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월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3년이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임원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체육계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의 방향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며 “신임 임원진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체육회의 사명



4년 전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뒀을 때다.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인삼각' 경주를 해야 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해묵은 이슈이긴 하나 대한체육회(KSOC),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논쟁이 재점화했다.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임기 종료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어났다. 이 규정은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개정돼 일단락 지어지기는 했다.

대한체육회는 특히 선수 인권과 관련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선거는 연임에 도전한 이기흥 회장과 그에 맞서는 후보들의 다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다. 정치권 못지않은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다. 일부 후보들은 서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쉬웠다. 앞서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 선거를 치르며 이 회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문체부와 냉랭한 관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체육계는 다시 선거철이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4년 사이 대한체육회, 아니 이 회장과 문체부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이 이어지더니 2024년 파리올림픽을 마무리하고서는 갈등이 극에 달한 모양새다. 선수단 해단식을 놓고도 불쌍사나운 신경전을 펼쳤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는 문체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각각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겹치며 대한체육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 뜨거워진 상황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이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등 임원이 3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 공식 선언이 나오지 않았지만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 관련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출마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 회장의 대항마를 자처하며 출마한 인사가 벌써 5명이나 줄을 잇는 등 이번 선거 역시 다자 구도로 향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4년 전 상황과 판박이다.

이전과는 완연하게 다른 양상도 눈에 띈다. 대한체육회 내부에서 이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더니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4년 전 문체부를 비판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이 회장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조직의 정치화·사유화가 가속되고 불필요하고 무모한 다툼이 거듭되고 있다"며 달라진 입장을 설명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대한체육회방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025년을 끝으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처럼 이 회장도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한체육회의 한 간부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지지했다고 한다. 8년 가까이 체육계를 이끌어 오며 이 회장이 쌓아 온 공도 분명 크겠지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 사회통합 실현. 대한체육회가 명문화한 대한체육회의 사명이다. 선거 때마다 이 전투구를 반복하며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스포츠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이기흥 회장, 품위 있는 퇴장을 준비하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의 3선 도전 여부가 체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적잖은 체육계 인사들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출마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회장을 지지하는 단체, 인사들은 노동조합 등을 비판하며 맞불을 놓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회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정부 압박도 점점 거세진다. 정부는 10일 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제기한 혐의는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이다. 최근 2~3년 이 회장 행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부가 행정력을 넘어 사법적으로도 이 회장을 옥죄는 형국이다. 정부의 행정이 과한 면이 적지 않지만 세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체육회 수장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증론이다.

대한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체육회가 체육행정 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동시에 세금, 기금을 제공하는 정부도 체육회를 관리,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돈을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정부 관리를 받지 않겠다는 체육회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느 국가에서나 비슷하게 체육계는 정권과 협력 관계다. 스포츠가 지역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및 국민 통합은 스포츠가 가진 막강한 힘이며 민심, 표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탐내는 유혹이다. 체육인들도 정부와 대립하는 체육계를 원치 않는다. 체육 재정을 정부에 의존하는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체육 예산을 줄이면 피해는 선수, 지도자, 체육계 종사자에게 돌아간다. 단기적으로는 사업과 활동이 움츠려든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쪼그라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민 신체활동도 제한을 받는다.

이 회장은 그동안 강력한 리더 역할을 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강한 힘을 이용해 체육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체육계를 흔들려는 정치적 외풍 방어와 반격 등을 효과적으로 해왔다. 이 회장 재임시절 사회에 대한 체육계 존재감이 과거보다 강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와 과도하게 대립하면서 역효과가 점점 커진다. 파리올림픽 이후 이 회장과 정부 간 진흙탕 싸움 속에서 애꿎게 몰매를 맞은 기업이 생기면서 산업계에서 체육계 투자를 피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체육회로 교부해온 예산 중 300여억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돌렸다. 무엇보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한숨과 손가락질에 이어 외면, 무시, 경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3선에 도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공정위원 임명을 사실상 주도해 '셀프 승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원회는 12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규정상으로는 3선 도전을 거부할 문구가 마땅히 없다. 3선 포기는 결국 이 회장 본인만 할 수 있다.

체육계가 국민 신뢰를 되찾고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 이 회장이 무엇을 해야 할까. 출마를 포기해야 할까, 출마를 강행해야 할까. 이기흥 체제가 한 번 더 이어진다면, 체육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좋아지고 정부 지원이 든든해지며 기업들 투자도 늘어날까. 리더는 유능한 시작보다 품위 있는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

[단독] “이기흥, 11일 국회 출석 요구 받자 하루 전 사비로 스위스 출장”

정부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부정 채용(업무 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제삼자 뇌물),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 회장 등의 비위 혐의를 확인해 이같이 조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회장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과 관련해서도 체육회 관계자 11명의 감사·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체육회의 비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해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2년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는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이 있어야 했는데, A씨에게는 이런 경력과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선수촌 간부 B씨에게 A씨 이력서를 주면서 경력·자격 요건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선수촌 담당자들이 이에 반대하자, 이 회장은 “어떤 XX 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1시간가량 욕설과 폭언을 했고, 채용 담당 부서장은 교체했다. 결국 채용 공고에서 경력·자격 요건이 삭제됐다. B씨는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A씨에게 최고점을 줬고, A씨가 채용됐다. 이 자리에 지원한 다른 31명은 탈락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체육회 산하 단체 회장 C씨가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 올림픽 관련 중요 직위를 맡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지난 5월 C씨가 체육회 물품 구입비를 대납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해당 직위에 임명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C씨는 실제로 약 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체육회로 후원 물품이 들어오자 이 가운데 휴대전화 20대 등 6300만원어치를 가져갔고, 이 가운데 1700만원어치를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지인들에게 나눠준 정황도 적발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회에 들어온 후원 물품에서도 신발·선글라스 3500만원어치를 가져가 1600만원어치를 직접 쓰거나 방문객들에게 나눠준 정황도 밝혀냈다.

체육회가 올해 파리 올림픽 참관단으로 선발한 98명 가운데 5명은 체육회와 관계없는 이 회장 지인으로, 이 회장이 추천해 참관단에 포함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5명은 다른 참관단원과 달리 경기 참관 일정에 불참하고 파리 관광을 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이 회장은 또 문체부와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을 하게 되자 체육회 담당자에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온다면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점검단은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의 체육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전북 남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그런데 점검단이 조사해보니, 이 회장은 이 행사가 오전에 끝나자 오후에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이동해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4시간 넘게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체위는 이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11일 체육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지난 8일 문체위에 ‘11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에 참석하고,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 스포츠 기구 관계자들을 면담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10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국회 출석 회피용 출국을 지원했다는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한 체육회 사무처가 ‘출장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1000만원 넘는 사비를 들여 출장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할지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최저학력 미달한 학생 선수도 대회 참가 가능해진다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 당초 경기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학생 선수들도 앞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선 안 된다는 '최저학력제'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는 고등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됐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초·중학생 선수는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 대회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 체육계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학생 선수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경기력이 저하해 결국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급에 관계 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선수들의 피해 복구 가능성이 적은 점, 진로·진학을 위해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당초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천675명이 대회 출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학생 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72.4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긍정적”

학생 선수들의 시험 점수가 일정 이상을 넘지 못하면 대회에 나갈 수 없게 규정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 72.44%는 최저학력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6%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운동을 한다 해도 일정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68.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성인이 된 후 제 2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 27.65%, ‘일본, 미국 등 해외 국가도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3.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34%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성적을 이유로 대회도 못 나가는 게 차별적이기 때문에’가 73.09%였습니다. ‘지역별 교육 격차 때문에’ 14.8%,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9.87%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2.24%입니다.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 제도를 유지한 채 부분 수정’이 51.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유예 후 재논의’ 22.13%, ‘전면 폐지’ 13.1%, ‘현행 유지’ 11%, ‘기타’ 1.98% 순이었습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장 출마'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밝은 스포츠 미래 만들 것"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1_0002954552

국제스포츠전략위 이사장에 박주희 선임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166850.html

SBS 스포츠국장, 자녀에 파리올림픽 취재진 출입증 발급 '징계'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74>

[단독] 스포츠 외교 공백 지운다... IOC, 새 한국인 위원 검토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1508524?OutUrl=naver>

트럼프 태권도복입고 단증받는 영상보니 "훌륭한 스포츠, 한국 사랑해"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8022700071?input=1195m>

장애인스포츠 새로운 '스타' 김윤지, 마음도 MVP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378>

스포츠의 메카 '서귀포' 전지훈련 3만명 돌파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892>

여성체육위원회, 오는 13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여성 스포츠 포럼 개최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11110720003?pt=nv>

화성시,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출범... '스포츠 도시' 발돋움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111500114&wlog_tag3=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